

조선대 로스쿨 소송 승소

법원 “전남대 인가 위법이나 취소는 불가”

조선대, 국가 상대 손배소 검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이 위법했으나 학생들이 입학한 현재의 상황에서 인가 취소는 어렵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7면)

이번 판결은 비슷한 재판의 1심에서 평소하고 환소한 단국대, 흥의대, 영산대 등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지난달 30일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 가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교과부)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남대·원광대·전북대·제주대 등 호남권 4개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요구(예비인 가치분 취소 소송)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인복)도 조선대에 로스쿨 예비인가를 거부한 교과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구(예비인 가치분 취소 소송)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남대 로스쿨 인가 취소될 경우 무고한 1기 입학생 120명이 막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점,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차질, 전남대가 서율 외 권역에서 2순위로 평가돼 어차피 인가를 받을 수 있았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기각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고 한다. 사정판결의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

조선대는 지난해 2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관계에 있는 전남대 교수가 로스쿨을 선정하는 법학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호남권역에서 로스쿨을 인가받은 전남대 등 4개대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13조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자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을 심의·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서 로스쿨을 신청한 전남대, 이화여대, 서울대, 경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이는 제척 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 취소에 따른 사회적 실익을 검토한 결과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의한 절차의 반복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8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선대가 낸 소를 기각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교과부는 재판부 판결의 취지를 검토해 받아들이고 즉시 로스쿨 정원을 증원해 자격을 갖춘 대학교로 로스쿨을 인가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상고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대통령에 대해 오후 1시 40분께

盧 前 대통령 혐의 대체로 부인

검찰 방대한 자료 제시 조사

“맞다” “아니다” 단답형 답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박연자 게이트’ 의혹과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4면)

대검 중수부는 이날 소환에 응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오후 1시 40분께부터 4시 10분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및 박 회장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10분간 휴식하고 곧바로 10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저녁식사 시간인 오후 6시 30분까지 신문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검찰은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노 전 대통령 진술의 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노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가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100만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서 때와 마찬가지로 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검사의 질문에 “맞

다”, “아니다” 또는 “기억이 없다”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다 법적 평가 등 자신이 해명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간혹 길게 답변하는 식의 진술태도를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주임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이 신문을 하는 가운데 직무관련성 부분은 김형욱 검사, 100만 달러 의혹 부분은 이주형 검사가 배석했으며 문재인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을 도왔다.

또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과 흥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조사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질문 내용을 수정해 지시하는 등 신문을 지휘하는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에게도 수사 내용이 시시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자정까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 회장에게 직접 600만 달러를 요구했는지와 금품이 오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본격 조사했다.

또 검찰은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을 주수하고 경남은행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도 신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5년~2007년 7월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지도 조사했다.

/연합뉴스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 과정이 나온 이후 55년만의 일이다.

시안은 또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10년 정도)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도가 도입되고, 산업이나 예·체능 전문가,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